행정안전부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보도 일시	2022. 2. 18.(금) 09:35		
담당 부서	안전정책실 예방안전과	책임자	과 장 임경숙 (044-205-4510)
		담당자	사무관 전병훈 (044-205-4514)

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대비 사회필수 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연속성계획(BCP) 수립

□ **행정안전부**(장관 전해철)는 **코로나19 감염병 확산**으로 인해 **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과 시설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1,122개 기관**(2.18. 현재)*이 **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였다고** 밝혔다.

* 「재난안전법」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: 중앙 47, 지방 245, 교육(지원)청 188, 공공기관 등 642

□ **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** 코로나19로 인한 접촉자 및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**교통, 물류, 치안, 농식품 공급 등 사회 필수 기능과 관련된 종사자 및 사업장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계획을 수립**하여 **국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**이다.

○ 지난 1월 18일 기능연속성계획 지침(가이드라인)을 전 부처에 배포하고 **2월 7일 대통령도**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**계획수립 현황을 점검**한 후 "사회 필수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**소관 부처별 필수 기능 유지계획에 대한 철저한 시행" 을 당부**하였다.

○ **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기관**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에너지(전력 · 가스 · 석유 등), 교통(항공 · 철도 · 도로 등), 환경(수자원, 매립지) 등 사회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공사 · 공단도 포함된다.

□ **기능연속성계획의 주요 내용**으로는

○ **국민 생활과 밀접**한 핵심 기능에 대한 **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지원**을 위해 **종사자 보호 및 사업장 운영 지장** 등에 **대비**하여

○ **위기 단계를 2~3단계**로 가정하고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**인적·시설·장비의 확보**와 **비상대응체계를 구성**하여 위기 단계별 **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**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,

○ 한편, 기관 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청사 방역, 예방접종, 출입자 관리, 환기, 마스크 착용 등의 **감염 예방**과 함께 방역관리자 지정, 유전자증폭(PCR) 검사 등 **의심·확진자 관리 방안**도 포함하고 있다.

□ **주요 핵심 기능별 대책**을 보면,

○ **교육 분야**는 각급 학교 교원의 대규모 확진에 대비하여 온라인 수업, 교사 간 보강, 기간제 교원 투입 등의 비상 인력체계를 마련했으며,

○ **의료기관**은 의료인력 감염 비율 등을 고려하여 외래 비대면 진료, 코로나 병동 확대, 진료 우선순위 적용 등의 대책을 마련했고,

○ **치안 분야**에서는 112신고 처리, 여성·청소년 보호 등에 최우선적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,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기동대를 추가 투입하는 등 인력을 적극적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국민들의 **먹거리 공급망**이 마비되지 않도록 특정 도매시장에 집중된 물량을 분산하고, 가축방역을 위해 민간 수의사 902명을 투입하는 등 방역 기능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.

□ 아울러, 운송, 물류, 유통, 제조 등 **관련 업계와 단체 등에도 기능연속성 계획(BCP) 수립 등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**하여 **민간영역과 관련된 기능**에 **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** 할 계획이다.

□ **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** “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**핵심기능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매우 중요**하다”라고 하면서

○ “일선 현장에서 기능연속성계획이 **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** 등을 **관계부처와 함께 수시로 점검**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참 고 주요 기관별 핵심분야 현황

기능별		핵심업무 분야	부처명	핵심업무 분야
민간 협업 수행	농식품부	▸ 먹거리 공급망 유지 ▸ 농축산물 검역 및 가축방역 관리	산업부	▸ 에너지·자원의 안정적 공급 ▸ 대형마트·유통물류 기능 유지
	국토부	▸ 항공·철도(운항·여객·물류서비스) ▸ 교통(도로 유지, 고속버스 운행) ▸ 물류(수출입·간선 물류 서비스)	해수부	▸ 해상운송망 유지 ▸ 수산물 유통관리 ▸ 통상분쟁 방지 및 수산물 안전 확보
	환경부	▸ 식용수 공급(수돗물 생산·공급, 수질관리 등) ▸ 폐기물 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장 운영	복지부	▸ 사회복지시설(아동·노인·장애인 등) ▸ 의료기관 ▸ 어린이집 운영
	금융위	▸ 금융 정책·감독	방통위	▸ 방송사, 재난방송 업무 등 ▸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
	과기 정통부	▸ 통신 및 우정서비스 운영 ▸ 재난방송 지원	여가부	▸ 여성·청소년·가족복지시설 지원
	고용부	▸ 실업급여 지급 등 고용센터 운영 ▸ 직업훈련 시설 및 국가기술검정 운영	중기부	▸ 소상공인 지원
	지자체	▸ 교통망, 돌봄서비스, 취약계층 관리 ▸ 쓰레기 처리, 상·하수도 관리 등	공사공단	▸ 교통·에너지·보건·농수산식품·수자원·매립지·항만·해양교통·구호·방송·시설 관리 등
국가 직접 수행	행안부	▸ 재난관리(상황실, 중대본 2본부 운영) ▸ 정부청사 보안 및 시설관리	법무부	▸ 수용시설 운영(교도소, 소년원, 치료감호시설, 외국인 보호시설) ▸ 수사업무 및 출입국 심사 등
	경찰청	▸ 치안 유지 ※ 대민접점부서 대체인력 지원 등	소방청	▸ 재난·재해 및 화재 대응 ▸ 구조·구급 전문인력 동원
	해경청	▸ 해양 치안·안전 유지 * 상황실, 경비함정, 파출소, 항공단, 특공대, 구조대 등	관세청	▸ 수출입 물류 원활화, FTA협력 ▸ 세원 확보 및 불법 무역 단속
	외교부	▸ 재외국민 보호	문체부	▸ 국정 홍보 및 대국민 소통
	국방부	▸ 본부 위기관리기구 운영 ▸ 군사대비 태세 유지	식약처	▸ 진단키트·백신·치료제 생산·공급 ▸ 식품·의약품 안전관리 기능 유지
	기상청	▸ 기상 예·특보, 지진·화산 감시 ▸ 정보통신 운영	산림청	▸ 산불 방지·대응
	지자체	▸ 재난관리, 보건·방역 등	기타 부처	▸ 인사·재정·조달·법제 지원